

‘양돈협회’ 양돈산업 대표조직으로 육성

정부,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에 ‘양돈’ 우선 실시 돼지열병 및 PRRS 청정화… 대일수출 적극 도모

- 홍보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을 육성키로 하고, 조직화정도가 높은 '양돈'에 대해 우선 실시키로 했다.

양돈협회는 최근 '돈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양돈협회를 '돈육협회'로 확대 개편하여 돈육산업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등 향후 5년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양돈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생산자 스스로가 해당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돼지, 한우, 감귤, 쌀 등 생산액 3천억원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대표 조직 구성을 유도하며, 대표조직은 수급조절,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R&D, 교육훈련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농수협, 전문가 등과 함께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조직화정도가 높은 양돈, 감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양돈협회가 생산과 아울러 도축, 가

공, 유통, 소비까지 포괄하는 '돈육협회'로 확대 개편, 양돈산업의 대표조직으로 육성되고, 일관성 있는 국가 돈육산업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분야

양돈협, '돈육협회'로 확대개편

양돈협회를 '돈육협회'로 확대 개편하여 생산과 아울러 도축, 가공, 유통, 소비까지 포괄하는 양돈산업 대표조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제안기구가 여러 곳으로 혼재돼 있는데다 '생산'이 아닌 '돈육산업'으로 접근하는 정책파트너가 필요한 만큼 돈육협회를 통한 창구의 일원화로 일관성있는 국가 돈육산업 정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회의 경우 돈육협회로서 정부 정책 파트너를, 도조직의 경우 광역도시에 대한 돈육정책 파트너 역할을 각각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백18개 시군지부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파트너로 육성하고, '거북선 1호' 유통회사 참여로 농가판로 확보 및 소득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돈자조금과 관련해서는 대의원회에 실질적



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돈농가의 의지대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감사를 포함한 관리위원과 위원장 선출 모두 직선을 통해 선출하되 사업예산을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축산물이 제2의 식량'이라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한 돈육자금률 설정과 함께 돈가 폭락 또는 폭등시 수급조절 기능수행 및 자금률유지를 위한 생산안정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품목에 축산업을 포함, 낮은 생산성이나 고령화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사육시설까지 포함한 폐업보상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사료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사료포를 조성하는 한편 농가와 정부, 사료업체가 참여하는 사료안정기금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돈
농가분야** **돼지열병 청정화 실현**

MSY20두 실현을 위해 중돈장부터 PRRS 안정화사업 추진과 비육농장 격리사 지원으로 소

모성질환 피해 최소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2차 돼지열병 백신을 현행 톱백신에서 혼합백신으로 공급해 돼지열병 백신 항체를 유지할 통한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는 물론 오는 2012년 이전에 자금집행을 완료, 생산성 향상체계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장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육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이 가능한 전문컨설턴트 그룹의 육성, 맞춤형 교육, 네덜란드 PTC+와 같은 교육장의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방식으로 환경부의 공공처리장과 같은 대형공공처리장을 확충하여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도 처리비용만 부담하고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사업에 정부보조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처리 지양는 지양하되 공동·공공처리장 시설 확충을 통해 농가는 사육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
가공분야** **대일수출 적극 도모**

등급별 지육정산 방식 도입을 통한 고급육 생산 유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홍보 강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돈육품질 향상 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는 절식에 따른 사료비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돈열청정화 조기 실현을 통한 비선호 부위의

대일수출을 적극 도모하는 한편,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계도와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강화 및 판매장에서의 도축일자와 등급표시의무화도 제시했다. 특히 자조금사업을 활용한 도축후 10일 이내 소비와 모듬메뉴개발 유도방안도 제시했다.

도축장과 육가공장의 권역별 인수 합병 및 구조조정은 물론 도체 병변검사 정착을 통한 위생안전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등급판정이나 가축질병 외관검사 등의 결과도 농가 피드백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브랜드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갖춘 브랜드를 5개 이내로 육성, 유통시장에서 적정 가격지지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되, 나머지 브랜드는 지역특화 또는 기능성 브랜드로 전환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농축협이나 영농법인 브랜드의 비중을 60~70%로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전업양돈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돈 · 사료분야 **한국형종돈 개발, 사료안정기금 도입 추진**

국내 사육환경에서 항병력이 강하고 마블링이 좋은 종돈을 개발하는 등 한국형 종돈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국내수급을 조달하고 해외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차원에서 PRRS 안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되 항원 양성종돈의 도태비용 지원과 함께 항체 양성 종돈 거래시 비육농장의 격리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는 별도로 종돈장 PRRS 청정화 대책을 전개해 나가되 이를 비육돈농장으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1검정소의 경우 신축 현대화 시설인 점을 감안해 육질과 산육검정을 병행, 수입종돈대체와 종돈개량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되 제2검정소는 네덜란드 PTC+ 교육시설과 같은 현장실습장으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우수종돈 선발기회를 높이고 농가가 저렴하게 우수유전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검정소 출품 종돈에 대한 장려금(두당 10만원) 지원도 요청했다.

적정사육기간 준수와 고급육생산을 위한 경제사료 및 사양프로그램 재정립은 물론 손익분기점으로 운영을 권장한다는 전제 아래 공익 성격을 갖춘 생산자단체 사료회사의 시장점유율의 점진적 확대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축세 및 도축수수료 부가세 폐지, 축산업 소득세 감면과 지방세 이전, 축산용전기의 '농사용 값' 적용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즉석 햄 가공제품 제품 판매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양돈협회가 제안한 정책들 외에 정 장관은 단체들로부터 받은 각종 정책제안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내 T/F팀을 구성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협회가 제안한 의견 외에도 보다 넓은 범위의 돈육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양돈농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양돈**